

“동서고속철 대선 후보가 해결하라”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50억 원에 대한 불용위기 가능성이 현실화되자 여·야 대선주자들이 나서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과 김동연 기획재정부 차관은 지난해 연말 예산 국회에서 반영된 50억원의 예산과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빠 집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해당 사업 예산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온 후 집행방침을 처리하

예비타당성 재조사 부정적 50억 환수 위기

도 정치권 “강원민심 얻기 위해 진정성 필요”

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예타 재조사 결과가 지난 결과보다 낮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50억원의 예산은 연내 집행이 불가능해졌고 국고로 환수될 위기에 놓였다.

여야 정치권에서 ‘정책적 결정보다는 정무적 결정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정부가 경제성 문제를 들고

나오자, “이제는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의 조기 추진을 도 대선공약으로 약속한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 등이 사업 추진을 위한 명분과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여·야 정치권은 지난 4월 총선 때 해당 사업 추진을 공약했지만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는 만큼

대선에서 정치권이 강원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도 정치권 관계자는 “예결위 소속인 권성동(강릉)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지역균형발전 차원 등의 논리를 들어 50억원의 예산 집행을 압박하고 있고 최문순 지사도 당 소속 예결위원들과 공조하고 있지만 정부부처는 요지부동인 상황”이라며 “도의 3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동서고속화철도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선 후보들을 압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박지은 pje@kado.net

건설 설계·시공 청렴 실천 다짐대회

건설협 도회·강원건설단체연

내일 아모르컨벤션센터서

도내 건설업계가 평창동계올림픽 시설공사 등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설 설계 및 시공, 청렴 실천을 다짐한다.

대한건설협회 도회를 비롯한 9개 건설단체로 구성된 강원건설단체연합회(이하 건단연)는 오는 6일 오후 2시 원주 아모르컨벤션센터에서 도내 건설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설 설계시공 및 청렴실천 다짐대회를 개최한다. 건단연의 이번 다짐대회는 최근 평창동계올림픽 시

설공사의 본격적인 발주를 앞두고 일부 중앙부처 및 수도권지역에서 지방건설업체에 대한 시공능력을 불신하고 있어 이를 불식시키고 업계의 전체 이미지를 흐리지 않도록 자정노력을 통해 부정·부패를 없애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정동기 연합회장은 “중앙부처에서는 지방건설업체에 대해 시공능력이 떨어지고 신기술·신공법 개발이 미흡해 부실시공을 우려하는 등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해 있다”며 “이러한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키고 우리의 결의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도내 경제발전과 선진화에 견인차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현철

≡ 사 설 ≡

동서고속철 일단 착수하는 게 해법

-국가미래, 정부·정치권 신뢰 걸린 대사 미룰 명분 없어

춘천~속초를 잇는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이 또 다시 해를 넘길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2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한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과 김동연 기획재정부 차관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낮게 나와 기 반영된 50억원의 예산을 올해 집행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한다. 이 노선의 예비타당성을 재조사한 결과 비용편익(B/C)은 0.67, 정책적 종합평가(AHP)는 0.449로 모두 기준치인 1 이상, 0.5 이상에 미달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천신만고 끝에 확보된 50억원의 예산은 다시 국고로 반납되고 동서고속화철도 현안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 노선은 오랜 강원도의 현안이기도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의 신뢰가 걸린 사안이다. 서울~춘천~속초를 잇는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은 이미 지난 1987년 당시 노태우 대통령후보가 처음 내건 공약이다. 그리고 지난 20여년 동안 역대 대선은 물론 총선, 지방선거 등 각종 선거 때마다 단골공약으로 제시돼 왔다.

역대 정권과 오랜 세월을 거치는 동안 이 노선에 대한 연구와 검증이 어느 정도 이뤄진 것으로 봐도 무리가 없다고 본다. 무엇보다 이 노선을 둘러싼 주변환경이 급격하게 변했고, 당위성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최근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 이 노선의 추진을 약속했고,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 강원도민들이 기대를 걸어도 좋을 것이라는 언급을 한 바 있다. 이것은 단순히 지역의 강력한 요구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기본적으로 그만큼 수도권과 강원도 북부권~동해안을 잇는 철도교통망 구축의 전략적 당위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그동안 예비타당성조사가 들쭉날쭉 해왔거니와 동서고속철의 문제는 이미 그 유동적인 수치에 기계적으로 얽매어 가부를 결정할 단계를 넘어서 있다는 점을 주시해야 한다. 사안의 내용이 그러할 뿐만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이 그동안 약속과 번복, 재약속과 재번복을 거듭하면서 더 이상 퇴로가 없는 사안이다.

정부 일각에서 원주~강릉복선전철 등 강원도 SOC사업의 집종을 거론하는 기류가 나타나는 모양이지만 이 또한 동서고속철도의 사업을 미루는 명분이 될 수 없다. 어차피 이 노선은 올해 착수된다 하더라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고, 연차적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다. 이 노선은 향후 북방 및 환동해시대를 대비하는 기본 인프라일 뿐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의 신뢰가 민감하게 걸린 인프라다. 일단 착수하고 다음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순리이자 해법이다.

‘민간 건설공사 불공정 계약 심각 발주-원사업자 ‘건설민주화’ 시급’

추대석 이이재 새누리당 의원(국토해양위)

“민간건설공사의 시공계약서는 노예계약과 다름없다.”
국회 국정감사 첫날인 지난달 5일, 국토해양부가 술렁거렸다. 민간공사에서 보이지 않게 이뤄지는 ‘발주자의 횡포’ 사례가 동영상과 증언을 통해 전파되면서 장내는 침묵이 흘렀다. 발주자 요청으로 설계변경을 했지만 ‘도목·건축·설비 등 공사 중 어떠한 상태에서도 공사비 변동은 없다’는 내용의 특약으로 대금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 고발됐다.

결국 수익원에 달하는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20여명의 직원을 내보내야 했던 A건설사 관계자의 증언은 하도급 공정화 문제와 함께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의 불공정행위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이른바 ‘건설민주화’에 대한 문제다. 2-3개월에 걸친 현장 검증은 지난 411 총선에서 5선 도전장을 내민 현역 의원과 경쟁해 당당하게 국회에 첫발을 내디딘 이이재 새누리당 의원이 직접 나섰다.

공사대금 지급 지연·삭감부터
추가 공사 대금 지급 거절 등
민간 공사 ‘노예 계약’ 다반사
원사업자 보호 제도 마련 필요

경제활동 균등한 기회분배가 복지
SOC투자, 소외지역에도 돌아가야

“대금을 주지 않겠다는 특약이 현실적으로 말이 된다고 보기 어렵잖아요. 발주자는 대금지급 보증서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수주물량 부족 등의 문제로 ‘울며 겨자 먹기’로 수주를 하다 보니 지방 중소건설사들의 속은 엉망진창이 됐을 겁니다. 건설업은 원사업자가 부도 나면 하도급 업체도 연쇄적으로 도산하게 되고, 근로자들의 생계도 어려워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발주자의 잘못을 따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민간건설 분야에서 원사업자(수급자)를 보호하는 근거를 마련한 이 의원이 집무실에서 손을 내밀었다.

정치 관록 15년... “지역균형발전 행기겠다”

이 의원은 1998년 강원도지사 선거캠프에 합류하면서 정치계에 발을 내디뎠다. 2000년에는 한나라당의 소장 개혁파 모임인 미래연대 사무처장을 지내면서 당 쇄신을 위해 목적을 높였다.

“미래연대 사무처장을 지낼 때 다수의 국회의원과 인연을 맺었죠. 오랜 정치적 동지가 많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웃음)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장도 맡았고, 강원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도 지냈습니다. 하지만 건설분야의 직접적 연관업무는 이번 국토해양위가 처음입니다.”

그는 ‘SOC 사각지대’ 문제를 개선하고자 국토위를 지원했다. 목표는 천연액화가스(LNG) 생산기지과 종합발전단지 등 합성천연가스(SNG) 개발 사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삼척을 ‘미래 에너지 시장 선도 지역’으로 만드는 데 있다. 앞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에도 총력을 기울여 지난 9월 말 예비 지정을 확정 짓기도 했다.

“하고 싶은 일도, 해야 할 일도 많죠. 동해안권 경제자유

구역이 환동해안권 중심지로 서려면 동해안권 교통과 물류망이 획기적으로 개선돼야 하고, 양양국제공항도 활성화해야 하며, 공사 중인 동서고속도로 조기개통과 춘천-속초 간 고속화철도 건설도 필요합니다. 앞으로 동해가 관광에서 경제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겁니다.”

민간공사, 불공정 노예계약 근절

국회에 입성한 지 5개월 만에 맞은 첫 국정감사에서는 ‘불공정 하도급 근절 문제’를 제기했다.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고민에서 출발했는데, 민간공사에 눈을 돌려보니 발주자가 불공정한 계약체결을 하고, 공사대금 지급의 지연 및 부당한 삭감, 상납 요구, 추가 공사의 대금 지급 거절 등 상당한 문제가 발견됐다고 했다.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하면서 하도급자를 보호하는 데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죠. 그런데 민간에서 발주한 공사에서 원사업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나온 겁니다. 상당히 심각했죠. 발주자의 횡포로 원사업자가 부도 나면 하청업체나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은 파행적인 보호책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표준계약서’가 있지만, 이것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죠. 불공정한 노예 계약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는 또 공공공사(관급공사) 분야와 같이 원사업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국감 첫날에는 경기도 안양에 분사를 둔 트래콘건설 대표이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 민간발주 공사에서 이뤄지는 발주자의 횡포를 세부적으로 지적, 다른 의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를 개선하고자 지난달 30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 공사대금 지급 보증제도와 공사대금 담보제공정구권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계약상의 관계가 ‘공생적 대등한 관계’로 변화하는 것은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시대적 흐름이죠. 보증제도는 건설민주화의 핵심입니다. 유명무실한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방안도 담았습니다. 원사업자를 보호하는 정책은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는 것과 경제활성화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에서 대통령 선거 공약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도농 간 균형발전... “SOC 투자 지속해야”

국도, 해양, 도로 등 SOC 투자의 균형적 배분도 강조했다. 균형적인 국토발전을 위한 초치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SOC 투자 결정에 있어서 단순히 경제 분석에만 의존해선 안 됩니다. 소외된 지역의 배려, 재정자립도를 고려한 균형발전, 무엇보다 조화로운 공생의 관점이 필요한 거죠.”

6년 만에 이룬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예비 후보지’ 선정도 이 같은 견해가 반영됐다. 연말께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2024년까지 1조5000억원의 투입해 강릉과 동해지역을 총 4개 지구로 나눠 개발하게 된다.

“A라는 지역은 교통이동권이 좋지만, B지역은 매우 열악하다면 똑같이 세금을 내는 상황에서 볼 때 B지역이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니겠어요. 교통이 불편하니 경제활동에도 제약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경제활동의 균등한 기회 부여는 사회복지의 기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토위 예산안 논의에서도 ‘SOC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장기적 경기침체에 놓인 건설산업에 대해서는 “많이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침묵) SOC만큼 사회복지적 성격을 가진 영역이 없는데...”라며 복지국가 건설의 기초를 SOC 사업의 지속성으로 설명했다. 아울러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미래 ‘통일비용’으로 인식되는 북한 인프라 구축 사업의 적극적 추진도 제안했다.

한형용기자 je8day@

강원건설단련, 내일 건설 설계·시공 및 청렴실천 다짐대회

투명경영 실천·불공정 행위 근절 선포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주춧돌 역할을 할 강원도의 건설인들이 설계·시공 경쟁력 향상과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결의를 다진다.

강원건설단체연합회(회장 정동기)는 6일 오후 2시 원주시 태장동의 아모르컨벤션센터에서 '건설 설계·시공 및 청렴실천 다짐대회'를 개최한다.

종합전문·설비건설업, 엔지니어링업, 건축설계, 전기·정보통신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건설기계업 등의 업종별 단체의 강원도회 소속건설인과 공무원 600여명이 동참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강원 건설인들은 윤리·투명경영

실천, 담합 등 불공정 경쟁행위 지양 및 공정한 물·준수, 일자리 창출과 동반성장 기반 조성, 제값 받고 제대로 시공하는 건설문화 선도, 도민을 위한 사회공헌 및 나눔경영 실천 의지 등을 대내외에 선포한다.

또 정동기 연합회장이 도내 건설업계의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평창동계올림픽 추진본부와 강원도청 건설방제국에서 올림픽 관련 시설공사 발주계획과 부실·위법 건설사 실태조사계획을 각각 설명할 예정이다.

김국진기자 jinny@